

# 유럽에서 불평등 연구의 쟁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나뉘어서 사는 세상!(Divided We Stand)’은 ‘불평등은 왜 계속 확대되는가?’라는 부제를 붙여서 OECD가 2011년에 내놓은 보고서의 제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불을 열심히 때다 보면 나중에는 아랫목뿐 아니라 윗목까지 다 따뜻해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인내를 요구해 온 것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정책이었고, 이 과정은 유럽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덜컥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를 겪고 나서 되돌아보니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쪽도 하위계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럽과 미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난 30여 년을 되돌아보는 연구들이 활발하다.

이번 호에서는 EU의 지원을 받아 29개국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불평등의 확대와 그 영향’이라는 연구프로젝트의 잠정적 연구성과물의 일부를 소개한다. 불평등 주제와 관련된 연구영역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불평등의 확대(또는 완화) 추이를 드러내고 그 원인을 밝히는 연구이다. 둘째, 불평등 확대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논의하는 연구이다. 셋째, 재분배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책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연구이다.

소득불평등은 주로 가구단위로 측정되지만, 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단추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서부터 출발한다.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최근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근로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 때문에 개인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Salverda 교수의 글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단독가구의 증가와 가구 내 배우자의 노동공급 증가만 하더라도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최근에는 이차소득자의 근로형태가 시간제 일자리인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를 고려하여 불평등 확대의 영향요인을 구분해 내는 것은 아주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차소득자가 상위소득계층에서 증가하는가 아니면 하위소득계층에서 증가하는가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위소득계층의 노동공급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가? Werfhorst를 비롯한 연구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몇 가지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먼저 실제로 불평등수준이 높은 국가의 시민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용인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개인들은 재분배에 대한 열망은 강하고 국가의 개입을 원하는 강도도 강하다. 이러한 상충되는 현상은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 대체로 경제적인 좌-우 이슈들이 부각되지 않으며, 좌파정당들의 영향력이 적어서 저소득층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설명된다.

사회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 고용의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빈곤율의 감소로 이어지는가? 최근 20여 년간 유럽의 경험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막스(Mark)는 대답하고 있다. 또한 정책대상을 표적화하는 것이 재분배의 효과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표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과거 처럼 비취업 저소득층에 집중된 공격소득이전은 Korpi & Palme(1998)가 말한 '재분배의 역설'에 들어맞는 결과로 재분배효과를 감소시킬 것이지만, 최근에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 지원과 적극적인 활성화 조치의 결합은 재분배의 효과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이 재분배적 효과를 낳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대답이 막스를 포함한 연구프로젝트팀의 결론으로 제출되고 있다. **KLI**